

“국가기록원 분원 광주에 신설 5·18조사위 기록물 보관해야”

광주시의회·전남대 5·18연구소 5·18 정책 현안 토론회서 제기 지속적 연구·오월정신 계승 시급

국가기록원 분원을 광주에 신설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기록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의 지속적인 연구와 오월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라도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록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대 5·18연구소가 2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5·18 정책 현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지난 2023년 12월 종료된 진상조사위 조사 활동 이후 정부에 전달한 11가지 ‘권고사항’과 관련, 향후 5·18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된 주제는 5·18기념사업법 제정, 5·18법의 학센터 건립, 5·18유공자지원센터 설립, 5·18유공자수당 신설, 국가기록원 광주분원 설치, 교육연구문헌재단 설립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5·18기록물을 활용한 5·18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기록원 광주분원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진상조사위가 생산·접수한 5·18기록물은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김희승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5·18진상조사위가 수집·이관한 5·18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면서 자료 접근권이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광주에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근간이자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기록물을 중심으로 광주에 민주주의 기록관을 신설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은 현재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 분원을 두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호남권에 분원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당시 확보한 암매장·행불자 DNA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5·18법의학센터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센터를 신설해 최신 유전자 감식 기술을 활용하고 STR과 SNP 분석을 병행해 감식 정확도를 높이며 행불자 가족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장기적인 감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5·18교육연구문헌재단(원)을 신설해 5·18 진상규명 성과와 자료 등을 계승하고 5·18 교육, 연구, 문화 관련 사업을 통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18유공자 대다수가 궁핍하게 살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해 정부차원의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5·18피해자로서 받은 보상금과 별개로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형평에 맞게 매월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5·18기념사업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현행법에도 ‘5·18기념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새로 기념사업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김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5·18사적지 활용 계획, 국립트라우마센터 등 대규모 예산이 동원되는 사업도 현행법상 충분히 가능한데, 새로 입법하는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또한 기념사업법 제정 시 기념사업의 구분과 국가, 지방정부, 기관, 단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분배를 명확히 하고 민간 주도성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6월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서 11개 항목의 ‘국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권고 사항에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 5·18기념사업을 국가가 책임·지원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할 것, 신군부 세력의 내란 등 범죄가 계엄법을 악용해 저질러진 만큼 계엄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 등이 포함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튀김도 척척’ 학교급식 로봇 27일 광주 송원고등학교 식생활관 ‘송원관’에서 열린 ‘급식 로봇 기증식 및 시연회’에서 협동로봇 전문 기업 뉴로메카의 ‘INDY’ 모델이 튀김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로봇 도입은 송원고 제16회 졸업생인 리우테크 정성철 이사의 기부로 이뤄졌으며, 학생 급식의 맛과 안전성은 물론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유족 정신적 손배 승소

‘5·18 마지막 수배자’ 고(故) 윤한봉(1947~2007) 선생의 유족이 정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채승원)은 윤 선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유족은 정부에 1억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1억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윤 선생은 전남대에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받고 투옥됐다.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투옥과 도피 생활을 반복했다.

5·18민주화운동 때는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수배된 뒤, 화물선에 숨어 미국으로 밀항했다. 12년간 미국 망명생활 중에는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 등을 만들어 통일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

1993년 5·18 수배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되자 귀국해 5·18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벌이다 2007년 6월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유족들도 윤씨의 가나긴 도피과정 및 망명생활에서 신체손상 내지 생명박탈 등의 위험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육아 힘들어” 두 아들 감기약 먹여 입원 연장한 엄마 징역형

홀로 2명의 남아를 기르는 육아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원한 자녀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몰래 투약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입원 중인 자녀 2명(1·3세)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구토 및 모혈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혼자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오던 A씨는 자녀들의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을 해야 함에 따라 자녀들을 더 오래 입원 시킬 생각으로 성인용 감기약을 숨가락으로 먹이거나 주사기를 이용해 수액에 섞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횡단보도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이유는

화제의 판결

신호위반을 하며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당시 택시 주행 정황과 승객의 진술을 토대로 “택시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통사고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병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택시기사 A(70)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해 직진하던 중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발생 전 3초간 차량 속도 40km→88km로 비정상적 증가 가속페달 밟았을 가능성 낮아 광주지법 “과실 단정 어려워”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지만, A씨의 택시는 이를 초과해 시속 88km의 속도로 직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때까지 택시의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다. 사고발생 후 택시의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의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EDR(Event Data Recorder·자동차사고 데이터) 정보상 사고 발생 5~3.5초 전 사이에는 택시의 속도는 시속 37~38km, 분당 엔진회전수(RPM)는 2900~3000 사이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사고발생 3초전부터 차량 속도와 엔진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속도와 엔진회전수는 시속 40km, 3300(사고 3초 전)→57

km, 4500(2초 전)→76km, 6000(1초 전)→88km, 6900(사고시)까지 증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수로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조작했을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37km로 서행 중이었던 만큼 강하게 제동페달을 밟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실수로라도 3초 이상 강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택시 승객의 진술도 영향을 끼쳤다.

사고 당시 A씨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은 법정에서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사고 직전 갑자기 택시 속도가 빨라지고 배기음이 크게 들리면서 차량이 튀기며 앞으로 진행해 급발진으로 생각했다”면서 “당시 택시 배기음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소리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A씨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오벌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령노동부 감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표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리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